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합의에 부쳐

허재준*

1997년 12월 22일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신청 1주일 만에 IMF는 5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한다. IMF 역사상 최단기간에 이루어진 최대금액의 구제금융 결정이었다.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가 발족한다. 그리고 이듬해 2월 9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상징적 조치인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의 90개항에 합의한다. 사실 당시의 노사정 합의는 IMF가 구제금융 패키지와 함께 우리나라에 부과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는 구조개혁 메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노조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며 주도한 사회적 합의였다.

IMF의 구조개혁 메뉴에는 그 외에도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확대, 국제기준에 의한 회계제도 도입, 대폭적인 기업 구조조정 등 당시로서는 하나같이 폭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노사정 합의는 사회불안을 최소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로부터 11년 후 한국경제에는 다시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원인은 우리나라 기업의 부실화에 따른 금융기관 자금난이 아니라 미국 금융기관 부실화가 국제금융시장에 기축통화의 공급을 비정상적으로 줄임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난을 촉발하고 있어 당시와는 위기의 원인이 크게 다르다. 하지만 어찌됐는가,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데다가 아직 국제금융시장에서 개도국(emerging economy)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여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이 약한 것을.

그 원인이야 어떠하든 수습의 책임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국제경제규범을 탓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더라도 일단 위기 극복은 하면서 할 일이다. 이러한 계체에 한국 노총과 경총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고 20일 만에 임금안정·고용유지·사회안전망 확충을 주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그 어떤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사회정책연구본부장(hurjj@kli.re.kr).

하고 위기 극복에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전자를 재확인해 준 일이라 하겠다.

그 주요한 내용은 경제위기 극복기간 동안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임금동결·반납·절감(감축)을 실천하며,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점이다. 특히 대기업은 사내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정부는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실업자 등의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하기로 했다.

양보와 타협은 아름답다. 노사는 개별사업장 수준에서 금번 위기를 신뢰 구축의 기회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 고용안정성과 기업 번창을 함께 구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안전망 투자에 인색하게 출발했던 현 정부도 금번의 위기를 기회로 한국적 현실에 맞는 사회안전망의 빈자리를 메꾸어 외환위기 이후 축소 일로를 걸어온 중산층을 확대하고 건강한 사회의 기틀을 만드는 정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러한 전통과 한국적 사회안전망을 국제사회에 수출하는 것일 수 있다. 한국경제의 위상 또한 이를 통해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KLI**